

불확실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부 개입: 케인즈와 하이에크*

황 재 홍**

논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정부 개입의 문제에 있어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철학적, 이론적 차이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데 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개념에 기초한 하이에크의 케인즈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예의 길』에 대한 케인즈의 평가에 담긴 의미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과 합리성에 있어 케인즈와 하이에크 사이에 인식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또한 케인즈와 하이에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정부 개입 또는 비개입에 대한 논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핵심 주제어: 케인즈, 하이에크, 정부 개입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2

투고 일자: 2011. 11. 1. 심사 및 수정 일자: 2011. 11. 14. 게재 확정 일자: 2011. 12. 16.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074).

** 목원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조교수, e-mail: zootjhong@hanmail.net

I. 서론

제한된 정보와 지식은 정부의 개입을 초래하는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전자는 케인즈의 입장을, 후자는 하이에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모델과 달리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의 상황에 주목하였다. 정보가 부족하고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학 모델에서와 같이 경제주체들이 완전정보를 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케인즈와 하이에크 양자 모두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리적 모형화에 의한 설명이 불가능하며, 인간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최초로 의도되지 않은 여러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설명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임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렇듯 양자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양자에 있어 정부 (비)개입의 이론적 근거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개입에 대한 입장 차이를 가져온 이론적 차이점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하이에크의 케인즈 비판: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우리는 일반적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를 완전히 거부하였다. 우리는 그 공과에 따라 모든 개별 사례들을 판단할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 경험, 자기통제를 요구하였다. 이는 우리 신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도덕, 관습, 통념 등을 완전히 거부하였다. 말하자면 우리는 비도덕주의자였다... 나는 여전히 비도덕주의자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Keynes, 1972a, pp. 446-447).

위의 문구는 케인즈의 “나의 초기 신념들”에 등장하는 문구이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저서에서 여러 차례 이 문구를 인용하면서 케인즈의 입장을 전형적인 구성주의(Constructivism) 또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Constructivist Rationalism)로 분류하

고 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구성주의 또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모든 유용한 제도가 이성의 창조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성엔 명시적인 몇몇 전체로부터 연역적인 과정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는 능력이라고 믿고 있다(Hayek, 1967, pp. 84-85). 하이에크에 있어 이러한 구성주의는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인간이 전체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는 오만에 이르게 된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자신의 이론을 구분 짓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비판적(진화적) 합리주의(Critical or Evolutionary Rationalism)로 지칭하였다(Hayek, 1973, p. 5). 이러한 구분은 때로 합리주의와 반합리주의, 사이비 개인주의와 진정한 개인주의라는 용어로 서술되기도 했다.¹⁾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 행위의 완전한 합리성은 관련 사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한다. 사회설계자는 자신이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데이터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불가능하다. 사회현상의 복잡성과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개별 주체들은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하이에크에 있어 규칙은 이러한 구조적 무지를 극복하는 수단이 된다(Hayek, 1976, p. 8).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행위 규칙은,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모든 구체적인 사실들을 개인들은 파악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한 적응인 것이다(Hayek, 1973, p. 13). 사회제도가 인간 이성의 설계물임을 주장하는 구성주의와 달리 하이에크는 사회제도와 질서는 자생적으로 출현한 것이며 자생적 사회질서와 규칙은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관습과 전통으로서 형성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Hayek, 1988, p. 6). 이렇듯 관습과 전통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며, 규칙들은 그것에 순응한 집단들이 더 번성했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하이에크는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의 생존과 유지에 적합

1) 이성의 힘을 과신하여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구성주의는 결국 전체주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하이에크는 이를 사이비 개인주의라고 지칭했다(Hayek, 1948). 또한 합리주의와 반합리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위 반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한계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하며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과정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는 이러한 통찰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리주의라는 용어가 이성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나는 합리주의자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이성이 모든 행동을 결정해야한다는 것이 합리주의라면 나는 합리주의자가 아니다(Hayek, 1973, p. 29).”

한 규칙들을 암묵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전통과 관습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결국 하이에크에 있어 전통이 없이는 문명의 확장된 질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규칙과 관습을 거부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주장하는 케인즈의 문구는 이성을 과신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전형적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이에크의 케인즈 비판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인간들은 규칙과 관습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규칙과 관습을 거부하고 개별 사례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인식론적 비관주의/전통주의(epistemological pessimism/traditionalism)와 인식론적 낙관주의/합리주의(epistemological optimism/rationalism)의 구분과 연결되어 있다. 포퍼(Popper, 1963, pp. 5-6)에 따르면, 인간이 진리를 확인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 인식론적 낙관주의의 핵심에는 ‘진리는 명백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진리가 베일에 싸여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반면 인식론적 비관주의는 이성에 대한 불신과 연결된다. 인식론적 비관주의와 인식론적 낙관주의의 대립은 인식론적 전통주의와 인식론적 합리주의의 대립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포퍼는 설명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식별 가능한 진리가 부재할 경우 인간은 전통의 권위와 혼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인식론적 전통주의의 믿음이다. 반면 인식론적 합리주의는 이성의 힘을 믿으며, 비이성이나 편견 또는 우연에 근거한 전통이나 권위를 거부한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에 대한 힘을 과신하여 그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규칙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Hayek, 1967, pp. 92-93). 반면 하이에크에 있어 인간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며 오류가 많은 존재이다(Hayek, 1948, p. 8).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미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개인들은 자발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규칙과 관습을 따름으로써 이러한 무지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개인들의 판단과 행동에 있어 하이에크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의 한계와 인식론적 비관주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나 공공기관도 미래에 관한 행동을 안내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직 시장만이 분산된 지식을 개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시장이론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분권화되고 익명적인 의사결정이 시장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정부개입에 대한 하이에크의 주된 비판은, 정부 개입을 옹호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확실성, 데카르트적 이성, 계산된 예측 등의 요소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질서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개입의 주체가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서는 개입의 주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Hayek, 1988, p. 84).

Ⅲ. 하이에크의 케인즈 비판이 가지는 문제점

1.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개념의 일관성

하이에크는 이성의 힘을 과신하며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시각을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고 정의하면서 이에 근거한 정부의 개입은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케인즈를 이러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신을 이러한 합리주의와 구분 짓기 위해 비판적 합리주의 또는 진화적 합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케인즈 비판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적 합리주의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 절에서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가지는 인식론적 낙관주의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말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보다 복잡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다이아몬드(Diamond, 1980)에 따르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인식론적으로 이성에 대한 믿음과 연결될 뿐 아니라 윤리학적으로 사회계약 이론, 벤담의 공리주의와 연결된다. 또한 정치학적으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과 동일시된다. 하이에크에 의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 분류된 학자들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공리주의자 벤담과 사회계약론자 홉스와 루소는 물론 콩트, 데카르트, 헤겔, 맑스 등등이 모두 하이에크에 의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 분류되었다. 반대로 하이에크 자신은,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과학이 인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설명하는 것임을 주장해온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전통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흄, 맨더빌, 아담스미스, 토크빌, 멩거 등을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대비되는 비판적 합리주의자로 구분하였다. 특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합리주의는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와 가장 근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하이에크에 의해 분류된 이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이 하이에크가 서

술하고 있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Diamond, 1980, pp. 356-358). 가령 하이에크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이성에 대한 과신으로 정부의 개입, 사회전체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합리주의로 구분된 아담 스미스가 정부의 이자율 제한법에 찬성한 반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 벤담은 오히려 이자율 제한법에 반대하였다. 또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사회제도가 인간의 설계물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이에크는 비판하고 있는데, 같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 구분된 헤겔이나 맑스의 경우 사회제도가 인간의 설계물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또한 흄스와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 구분하고, 로크 같은 계약론자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이에크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이에크 자신은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가 자신이 표방하는 합리주의와 가장 유사하다고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퍼는 인식론적 비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회설계 혹은 사회공학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공학자가 기계를 설계하듯, 점진적이기는 하나 인간은 사회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Popper, 1957, pp. 64-67). 하이에크에 있어 인식론적 비판주의는 정부 개입의 불가능성에 대한 근거였다. 하이에크는 인식론적 낙관주의에 근거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반자유주의라고 주장하였다(Hayek, 1967, p. 94). 이와 달리 포퍼는 “인간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구절을 인식론적 낙관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상을 연결하는 고리로 보았다. 역사적으로 인식론적 비판주의는 강력한 권위주의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는 것이 포퍼의 주장이다(Popper, 1963, p. 6).²⁾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하이에크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개념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하이에크 대 하이에크

하이에크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보다 더 중대한 결함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역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2) 인간의 무지와 정부 개입 사이의 관계에 있어 하이에크와 포퍼의 시각차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Kerstenetzky (2007) 참조.

점에 있다. 하이에크 이론에 내재하는 이러한 비밀관성에 대한 지적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쿠카다스(Kukathas, 1990, p. 206)의 경우, 하이에크의 사고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철학적 태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질서를 옹호하려는 그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베르그(Vanberg, 1994, p. 179)의 경우 이를 “합리적 자유주의”와 “진화적 불가지론” 사이의 첨예한 긴장이라고 서술하였다. 하이에크는 줄곧 사회제도와 질서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출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해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개혁, 자유주의적 제도 개선을 언급할 때 그는 구성주의적 태도를 취함에 있어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하이에크는 “나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라는 글에서, 보수주의는 그 특성상 현재 진행방향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길을 따라 끌려가는 것이 보수주의의 운명이라고 서술하고 있다(Hayek, 1960, p. 398). 『법, 입법, 자유』 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기존 정부 형태의 퇴보 과정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일종의 독재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체제에 의해 이 흔들리는 구조를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는 임시적 지적 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필연적으로 지적인 설계의 산물이다. 어느 한 사람에게 성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자유로운 성장을 위한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할 수 있다(Hayek, 1979, p. 152).

여기서 하이에크는 현재의 정부 시스템을 다룸에 있어 필요한 가이드를 제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를 대체해야 할 때 필요한 원칙들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역시 사회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처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지점이다(Kukathas, 1990, pp. 211-212). 구체적으로 하이에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 가령 중앙은행과 화폐독점발행의 폐지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반구성주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 과정에 있어 어떤 형태의 개입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의 후퇴로 보여진다.

3. 전통과 이성

하이에크의 저서 『법, 입법, 자유』 1권의 1장 제목은 “이성과 진화”이다. 첫 번째 절의 제목이 “구성과 진화”이며, 이 절은 “인간의 행위 패턴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Hayek, 1973, p. 8). 또한 하이에크는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동물인 것만큼 규칙을 따르는 동물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ibid., p. 11).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시각에서 인간은 (완전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목적추구적 행위를 하는 존재이다. 반면 비판적 또는 진화적 합리주의 시각에서 인간은 불확실성과 무지의 상황에서 진화의 결과물인 규칙과 전통을 따르는 존재이다. 하이에크는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에 있어 또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비판에 있어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케인즈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케인즈는 물론 하이에크 자신도 이러한 이분법을 철저하게 고수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하이에크 자신은 일관되게 규칙 따르기를 강조하고 있었는가?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 규칙 따르기는 행위주체의 독립적인 판단이 결여된 기계적인 규칙 따르기를 의미하는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비판할 때 하이에크는 의도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규칙 따르기를 대비시키며 후자를 강조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결코 개인의 이성적 판단 자체를 무시하거나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하이에크는 “합리주의의 갈래들”이라는 글에서 계획(planning)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자신이 반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중앙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적 차원의 계획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모든 경제적 행위는 다양한 목적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으로, 경제학자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하였다(Hayek, 1967, p. 82).

불확실성과 무지에 직면한 개인들이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보다는 규칙 따르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에서는 이성적 판단과 규칙 따르기가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분명 강하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규칙 따르기와 합리적 선택은 양립 가능한 행위패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칙은 어떤 특정 상황에 맞게 개조된 일반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구체적 행위의 어떤 측면만을 통제하거나 경계를 짓는다. 이 규칙들은 어떤 의식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제한한다. 일정한 행동을 제거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일상적인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의 여러 대안들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이다(Hayek, 1967, p. 56).

이렇듯 하이에크 체계 내에서 합리적 선택과 규칙 따르기는 때로는 배타적인 것으로 때로는 양립 가능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³⁾ 한 발 더 나아가 하이에크 자신이 “이성(구성)과 진화”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의 진화이론에 다시 구성주의적 합리성의 요소가 도입된다.

문화 진화에 있어 이러한 대부분의 진전들은 전통적 규칙을 깨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행동을 실행하는 개인들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Hayek, 1979, p. 161).

하이에크는 줄곧 불확실성과 무지에 싸여 있는 개인은 진화된 그리고 개인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규칙과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규칙과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다음의 구절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모든 전통적 가치들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 때때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어떤 가치나 도덕적 원리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사회과학자는 사회의 모든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가치들을 동시에 문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 의심은 문명의 파괴에 이르게 된다. 모든 전통적 가치의 완전한 포기는 불가능하다 (Hayek, 1978, p. 19).

3) 몇몇 학자들은 목적지향적 행동과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이에크의 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가령 브로멘(Vromen, 1995, p. 169)의 경우, 하이에크가 목적지향적 행위는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다. 반베르그(Vanberg, 1993)의 경우 합리적 선택과 규칙 따르기가 하나의 공통된 이론적 틀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 역시 모든 전통적 가치의 무비판적 수용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비판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모든 전통 가치의 완전한 포기과 동일시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 열거했던 인물들이 모두 전통적 가치의 완전한 포기를 주장했는지는 의문이며 결코 하이에크가 이를 입증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진술들은 결국 “구성과 진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하이에크가 케인즈를 구성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나의 초기 신념들”의 문구는 그 자체로 전통적 가치의 완전한 거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케인즈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 규정하게 만들었던 케인즈의 초기 신념이 과연 끝까지 유지되고 있는가는 케인즈 해석에 있어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 케인즈 연구자들 사이에서 케인즈 초기의 철학과 후기 경제학 사이의 (비)일관성 문제는 일명 “케인즈의 문제(Das Maynard Keynes Problem)”로 불리고 있다(Bateman, 1991). 『도덕감정론』의 스미스와 『국부론』의 스미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아담 스미스 문제(Das Adam Smith Problem)를 비유해 붙여진 용어이다. 이성적 판단과 규칙 따르기, 또는 전통과 관습의 거부와 전통과 관습 따르기라는 행위 패턴에 대한 이분법적 구도에 초점을 맞출 때, 케인즈 『일반이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관습에 관한 언급이다. 『일반이론』에서 케인즈는, 불확실성 아래 합리적 계산이 불가능할 때 경제주체들은 관습에 의존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일반이론』에서의 이러한 서술은 “나의 초기 신념들”에서 인용된 구절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이에크 전체 저작 속에서 “합리적 자유주의”와 “진화적 불가지론”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듯이 케인즈 전체 저작 속에 역시 “합리성”과 “비합리성” 사이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⁴⁾ 이런 상황에서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차이를 구성주의와 반구성주의,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이성과 전통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이분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케인즈의 초기 철학과 후기 경제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케인즈 연구자들의 해석에 관해서는 스킨델스키(Skidelsky, 1992, 3장)를 참조할 것. “확률의 박명(薄明)이 불확실성의 어두운 밤”으로 바뀌었다는 표현을 통해, 스킨델스키 자신은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케인즈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IV. 하이에크에 대한 케인즈의 평가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나는 당신의 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견해에 동의할 뿐 아니라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곳곳에서 인정하였듯이 문제는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선은 어디엔가 그어져야 하며 논리적 극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당신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이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신과 나는 다른 곳에 선을 그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중도 노선의 실행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합니다(Keynes, 1980, pp.385-386).

케인즈는 1944년 미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읽었으며 이 책을 높게 평가하는 편지를 하이에크에게 보냈다. 1930년대 초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화폐이론과 경기변동이론에 있어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다는 점에서 『노예의 길』에 대한 케인즈의 긍정적인 평가는 충분히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케인즈는, 자신과 하이에크의 차이는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 장에서 논의하듯이, 케인즈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 사이비 자유주의자로, 하이에크를 비판적(진화적) 합리주의자, 진정한 자유주의자로 이분하는 것은 둘 사이의 철학적 차이에 대한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는 하이에크가 말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처럼 인간의 이성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 케인즈가 장기적 견해를 취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은 장기의 상태에 대해 별로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버크의 주장은 옳다...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예측능력은 보잘 것 없으며 결과에 대한 지배력은 미미하다. 따라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현재의 행복이다. 불확실한 목적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Keynes, *The Political Doctrine of Edmund Burke*, Skidelsky(1992) 에서 재인용).

하이에크 또는 하이에크주의자들이 케인즈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 규정하는 근거로 사용된 케인즈의 “나의 초기 신념들”의 문구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서술이 이어진다.

우리는 벤담주의에서 가장 빨리 벗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18세기 이단의 고집 센 후예들이자 마지막 지지자였다. 우리는 지속적인 도덕적 진보를 믿는 마지막 유토피안 또는 사회개량론자에 속했다. 진실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신뢰할만하고 합리적이고 예의바른 사람들로 구성된 인류에 의해 진보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인류는 관습, 전통적 기준, 경직된 행위규칙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각기관과 선에 대한 순수한 동기와 신뢰할만한 직관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의 일반적인 정신상태의 원인과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해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었다. 우리가 인간 본성에 부여한 합리성은 판단의 천박함 뿐 아니라 감정의 천박함에 이르게 되었다(Keynes, 1972a, pp. 447-448).

이 문구를 보면, 젊은 시절 케인즈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숙한 케인즈의 생각은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과 무지, 관습이 강조되는 『일반이론』과 후기 논문들의 논조와 함께 이와 같은 케인즈의 서술들을 고려할 때,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모두 대륙적 합리주의(자유주의) 보다는 영국적 합리주의(자유주의)에 속한다는 판단 (Gamble, 1996, 7장)이 타당해 보인다. 양자는 모두 흄과 버크를 존경하였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맨더빌의 지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자는 모두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자였으며 결국에는 자신들이 같은 진영에 속해있음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Skidelsky, 2006, p. 86).

위의 인용구에 나타난 케인즈의 서술대로,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차이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는 (자유방임과 계획경제 사이에)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입의 영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케인즈는 자유방임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 주요 가정으로 자연선택이 진보로 이어지다는 가정,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로서 무제한적인 이윤추구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가정을 들고 있다(Keynes, 1972b, pp. 283-284). 케인

즈는 화폐에 대한 사랑(이윤추구)이 교환가치의 극대화를 가져다준다는 자유방임주의의 논리가 다윈이즘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이것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 불완전한 가정에서 나온 것임을 쉽게 잊게 된다고 케인즈는 주장하고 있다. 개인들이 독립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면 총체적으로 가장 큰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유기적이지 않다거나, 충분한 선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케인즈는 주장하였다. 사익과 공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개인에게 맡겨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개인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일이 된다. 케인즈는 다음의 세 가지를 국가의 아젠다로 분류하고 있다(ibid., pp. 291-292).

첫째, 현대 많은 경제적 해악은 리스크, 불확실성, 무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케인즈는 보았다. 개인들은 불확실성과 무지를 이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대규모 사업은 복권과 같아 큰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확실성은 실업의 원인이며 합리적인 사업 기대에 혼란을 초래하며, 생산의 효율성을 손상시킨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케인즈는 판단하고 있다. 둘째는 저축과 투자의 문제이다. 한 사회의 적절한 저축 규모, 적절한 규모의 해외투자, 현재의 투자시장이 저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 역시 사적인 판단이나 사적 이윤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았다. 셋째는 인구의 문제이다. 각 국가는 적절한 인구 규모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케인즈의 판단이었다.

하이에크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개인들이 각자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Hayek, 1979, p. 139). 정부의 권한은 타인에 의한 강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하이에크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소극적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때때로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금 징수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 된다 (Hayek, 1979; 1944). 하이에크는 시장체제 밖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보장과 시장을 통제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제공되는 보장을 구분하면서, 일반적 자유를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한도 내에서 전자는 정부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 생활수준의 보장이라든가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되어야 한다. 질병과 사고 등에 대비하는 것에 있어 국가가 포괄적 사회보험시스템의 조직화를 지원할 근거도 강하다고 하이에크는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자유방임주의와 거리를 두려고 했으며 자유경쟁의 규칙과 제도를 제공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했다.

남용되면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용어인 ‘자유방임’이나 ‘삶, 자유,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더 오래된 상투적 문구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두 문구 모두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제안이라면 이는 아무 대답을 안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정부의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Hayek, 1948, p. 17).

자유기업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법률들이 소극적인 기준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시장 메커니즘이 만족스럽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내용들 또한 필요하다(Hayek, 1978, pp. 145-146).

V. 관습과 사회 조화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시장의 균형과 효율성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의 합리성에 근거한다. 그리고 사익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 공익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반면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신고전학과의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회현상의 복잡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간의 인식능력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 계산보다는 규칙과 관습 등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규칙과 관습을 따르는 개인들의 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하이에크에 있어 규칙 따르기는 무지에 대한 대응이 된다. 그리고 개인들이 규칙을 따를 때 자생적 사회질서가 형성된다. 개인들의 행위는 구체적이지만 이들이 따르는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다. 개인들이 동일한 추상적인 규칙에 따라 반응한다면 공동의 목적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하이에크는 주장하고 있다(Hayek, 1976, p. 12). 하이

에크에 있어 무질서는 개인들이 규칙과 관습을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규칙과 질서는 문화진화의 산물이다.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와 진화는 쌍둥이 개념”이라고 주장했다(Hayek, 1973, p. 23). 하이에크에 따르면 규칙의 자연선택은 집단 질서의 효율성에 근거하여 작동한다(Hayek, 1967, p. 67). 즉 규칙은 그것을 행하는 집단이 더 성공적이기 때문에 진화해 왔다는 설명이다(Hayek, 1973, p. 18). 이렇듯 개인들이 규칙을 따름으로써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 그리고 개인들이 규칙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들에 결국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반면 케인즈에 있어 관습은 하이에크의 경우와 달리 항상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케인즈에 있어 관습의 본질은, 변화를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현 상황이 무기한 계속된다고 가정하는데 있으며(Keynes, 1973a, p. 152), 다수 혹은 평균적 행동을 따르는 개인들의 사회심리이다(Keynes, 1973b, p. 114). 케인즈는 분명 여러 곳에서 불확실성 아래 행위주체들은 관습에 의존하게 되고 이 관습에 의거한 행동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는다고 서술(Keynes, 1973a, p. 148, p. 152, p. 162; Keynes, 1973c, p. 3)하고 있다. 그러나 관습은 불확실성 아래 행위주체들이 의존하게 되는 일종의 피난처 같은 것(Carabelli & Vecchi, 1999, p. 287)이며, 그 근거가 박약하여 흔들리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은 ‘진정한 지식’ 또는 ‘진정한 기대’와 구분되는 것이다. 장기기대에 대한 케인즈의 설명에는 이러한 구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하여 어떤 종류의 투자물은 직업적 기업가의 진정한 기대에 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의, 주식가격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기대에 의하여 지배된다(Keynes, 1973a, p. 153).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투자물의 존속기간에 걸쳐 그것의 개연적인 수익에 대한 탁월한 장기적인 예측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보다 잠시 먼저 시장평가의 관습적 기초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ibid., p. 154).

투기라는 어휘를 시장의 심리를 예측하는 행동에 사용하고 기업이라는 어휘를 자본의 존속기간 전체를 통하여 그 예상수익을 예측하는 행동에 사용한다면... (ibid., p. 158)

결국 미국인이 투자물을 매입할 때 그는 그 투자물의 예상수익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평가의 기초가 유리하게 변화할 것에 희망을 거는 것, 즉 그는 위에서 정의한 의미에 있어서의 투기자가 되는 것이다... 기업이 투기의 소용돌이 속의 거품이 된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일국의 자본발전이 도박장 활동의 부산물이 된다면 일이 제대로 되기는 힘들다(ibid., p. 159).

이렇듯,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투자물에 대한 ‘진정한 장기기대’를 형성하는 매우 어렵다는 점과 함께 경제주체들은 관습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지만, 이 관습에 의한 투자물의 가치결정이 자본주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케인즈는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관습은 그 자체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충분한 투자를 확보한다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관습의 불안정성에 의하여 조성된다고 케인즈는 주장하고 있다(Keynes, 1973a, p. 153).

『일반이론』의 핵심 주제인 불완전고용을 설명함에 있어 위에서 서술된 자본의 한계효율의 불안정성 이외에 이자율도 문제의 근원으로 케인즈는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자율 문제 역시 관습과 밀접한 연결되어 있다.

이자율은 고도로 심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도로 관습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자율의 실제의 값은 대체로 그 값의 예측치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완전고용을 성취하기에 충분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관습적이며 상당히 안정적인 장기이자율이 변덕스럽고 또 고도로 불안정적인 자본의 한계효율과 결부되어 있다는 데 연유한다는 것이 이제는 독자들에게도 분명해졌으리라 믿는다(Keynes, 1973a, pp. 203-204).

이렇듯,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관한 케인즈의 논의에서 관습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관습에 의거한 경제주체들의 행위는 실업이나 불안정성 같은 부조화를 만들어내며 자본주의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

4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케인즈의 시각에서 실업의 원인이 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는 ‘정부의 아젠다’가 된다. 또한 정부 정책의 목적은, 관습이 야기하는 실업 등 사회 전체의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경

제주체와 시장의 관습을 바꾸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케인즈 이론체계에서 등장하게 되며, 케인즈는 정부 정책이 개인과 시장의 관습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보다 고무적인 관찰로부터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위안은, 관습이라는 것이 확고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화폐당국이 보여주는 매우 작은 정도의 고집과 일관성에 대하여도 항상 과도한 거부반응만을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희망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여론이라는 것은 이자율의 다소의 인하에 대해서도 비교적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이며, 장래에 대한 관습적 기대도 또한 이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자율이 더욱 하락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이다(Keynes, 1973a, p. 204).

정부 개입에 대한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에 대해 하이에크와 하이에크주의자들이 던진 의문은, ‘정부는 어떻게 불확실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이다. 경제 주체들이 관습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 정부는 어떻게 관습이 아닌 ‘진정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다. 케인즈가, 무지하고 비합리적인 시장참여자와 합리적인 정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지본(Fitzgibbons, 2003, p. 61)은 이를 ‘지식의 이분성(knowledge dichotomy)’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많은 케인지안들이 이 이분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⁵⁾ 이는 여전히 케인즈 체계의 심각한 약점으로 남아 있다. 하이에크의 ‘분산된 지식’ 이론은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개인에 비해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매우 강력한 비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하이에크와 하이에크 추종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개혁, 시장질서의 확대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와 질서는 자생적으로 출현하는 것이며 정부가 개인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정부는 자유주의적 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5) Carabelli & Vecchi(2001), Davidson(1996) 등을 참조.

VI. 맺음말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개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의 문제에 주목하였고, 독립적인 판단이나 이성적 계산보다는 규칙이나 관습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하이에크나 하이에크 주의자들처럼 합리적 선택과 규칙 따르기와 같은 행위패턴으로 케인즈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또는 합리주의자)로, 하이에크를 진화적 합리주의자(또는 반합리주의자)로 구분하는 것은 과도한 이분법으로 보인다.⁶⁾ 양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러한 규칙이나 관습을 따르는 개인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조화로 이어지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있다. 하이에크는 진화론을 이용하여 개인들이 규칙을 따름으로써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이것이 결국 개인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 반면, 케인즈는 관습적 행위가 초래하는 실업이나 불안정성 등 사회경제적 부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진다. 하이에크 체계에서는, 규칙을 따르는 개인들의 행동은 사회적 부조화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의 여지는 사라진다. 결국 불확실성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케인즈 체계에서는 관습을 따르는 행위가 사회경제적 부조화로 이어진다. 즉 불확실성의 문제가 조정되지 못하고 사회의 병리현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점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케인즈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 불확실성의 문제를 개인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케인즈와 케인지안들을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장질서의 안정성을 믿는 하이에크에 있어 시장질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고, 불확실성과 지식의 문제에 근거할 때 정부가 개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주장이 케인지안들에게 강력한 비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질서에 대한 개입의 문제에서 시장질서의 도입 또는 시장질서의 확대에 관한 개입의 문제로 옮겨가면 불확실성과 지식의 문제는 하이에크에게도 똑같은 딜레마를 안겨 주게 된다.

6) 일부 케인지언들도 이러한 구분에 동의한다. 이들은 대체로 케인즈의 초기 합리주의적 면모가 후기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 참고 문헌

1. Bateman, B., "Das Maynard Keynes Problem,"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5, 1991, pp. 101-111.
2. Carabelli, A., and N. Vecchi, "Where to Draw the Line? Keynes versus Hayek on Knowledge, Ethics and Economics,"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6:2, 1999, pp. 271-296
3. _____, "Individuals, Public Institutions and Knowledge: Hayek and Keynes," in *Knowledge, Social Institutions and Division of Labour*, edited by Porta, P., Scazzieri, R., and Skinner, A., Edward Elgar, 2001.
4. Davidson, P., "Reality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18, No. 4, 1996, pp. 479-508.
5. Diamond, A., "F.A. Hayek on Constructivism and Ethics," *Th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ol. 4, No. 4, 1980, pp. 353-365.
6. Fitzgibbons, A., "Keynes's Epistemology," in *The Philosophy of Keynes's Economics*, edited by Runde, J. and Mizuhara, S., Routledge, 2003.
7. Gamble, A., *Hayek: The Iron Cage of Liberty*, Polity Press, 1996.
8. Hayek, F., *The Road to Serfdo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
9. _____,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10. _____, *Constitution of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11. _____,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12. _____,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Rules and Order,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13. _____,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Routledge and Kegan Paul, 1976.
14. _____,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5. _____,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Routledge and Kegan Paul, 1979.
16. _____, *The Fatal Conceits: The Errors of Socialism*, Routledge, 1988.
17. Kerstenetzky, C., "Hayek and Popper on Ignorance and Intervention," *Journal of Institutional Economics*, 3:1, 2007, pp.33-53.
18. Keynes, J.M., *Essays in Biography*,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X, Macmillan, 1972a.
19. _____, *Essays in Persuasio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IX, Macmillan, 1972b.
20. _____,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VII, Macmillan, 1973a.

21. _____,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Part II Defence and Development*,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XIV, Macmillan, 1973b.
22. _____, *A Treatise on Probability*,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VIII, Macmillan, 1973c.
23. _____, *Activities 1940-1946*,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XXVII, Macmillan, 1980.
24. Kukathas, C., *Hayek and Modern Liberalism*, Clarendon Press, 1990.
25. Popper, K., *The Poverty of Historicism*, Routledge and Kegan Paul, 1957.
26. _____,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27. Skidelsky, R., *John Maynard Keynes Vol. 2: The Economist as Saviour 1920-1937*, Macmillan, 1992.
28. _____, "Hayek versus Keynes: the Road to Reconciliatio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Hayek*, edited by Feser, 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9. Vanberg, V., "Rational Choice, Rule-Following and Institution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n *Rationality, Institutions and Economic Methodology*, Maki, U., Gustafsson, B. and Knudsen, C., eds, Routledge, 1993.
30. _____, "Hayek's Legacy and the Future of Liberal Thought: Rational Liberalism versus Evolutionary Agnosticism," *Cato Journal*, Vol. 14, No. 2, 1994, pp.179-199.
31. _____, *Economic Evolution: An Enquiry into Foundations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Routledge, 1995.

Uncertainty, Rationality and Intervention: Keynes and Hayek

Jaehong Hwang*

Abstract

Both Keynes and Hayek focused on knowledge, uncertainty and convention, but lead to different conclusions on government intervention. The paper aims to show that Keynes and Hayek sharply disagreed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ventional individual actions and the social consequence of these actions. Both thought that conventions are useful guides for individuals, but Keynes stressed their negative social effect. The contrasts explain their different views on economic policy.

Key Words: Keynes, Hayek, intervention

Received: Nov. 1, 2011. Revised: Nov. 14, 2011. Accepted: Dec. 16, 2011.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Economics, Mokwon University, Mokwon Gil-21, Doan-dong, Seo-gu, Daejeon 302-729, Korea, Phone: +82-42-829-7756, e-mail: zootjHong@hanmail.net